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당한 해결을 위한
시 국 회의**

2015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시국회의 순서

□ 사회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경과보고
- 한일합의에 대한 입장 및 대응 방향
- 행동계획 및 기구 구성안
- 재단 설립 안
-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채택
- 한일 정부에 보내는 요구문 채택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경과보고

날짜	한일 정부	시민사회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 - 한국, 일본 각 3개항 발표 박근혜 대통령-아베 총리 통화, 외교장관 합의 추인	정대협 및 제시민사회 성명,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12월 29일	아베 총리,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사과도 없다' 외교부 1,2 차관 마포 정대협 평화의 우리 집), 경기 나눔의 집 방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통사, 겨레하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노동자연대 등 32개단체 공동성명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논평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의원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대표 기자회견
12월 30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것에는 손을 놓게 될 것'	1211차 수요시위 대학생 대책위 소녀상 앞 농성 돌입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성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성명 한국작가회의 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개청구 6.15노동본부(한국노총, 민주노총) 성명
12월 31일		희망나비 기자회견
1월 2일		대학생대책위원회 토요시위
1월 3일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성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성명
1월 4일	기시다 외무상, '소녀상 이전될 것으로 이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이해'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입장 발표 이화여대 시국선언 역사정의실천연대 성명
1월 5일		토론회 '한일외교장관회담 회담의 문제점' 대한불교청년회 성명
1월 6일		1212차 수요시위.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13개국, 45곳에서 동시다발 연대집회) 대학생 시국선언 경기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 시국회의 및 제 단체 간담회 제안서 배포
1월 7일	오바마 대통령,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북한 핵실험이라는 도전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	평화어머니회 기자회견 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성명
1월 9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제 단체 간담회. 37개 종교,시민사회단체 참석 한일 협상 무효선언 국민대회 개최
1월 11일	외교부 관계자 서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자택 방문	
1월 12일	아베 총리, '소녀상 이전될 것으로 생각', '박대통령에 사과한 것으로 해결'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최대한 성의를 갖고 최상의 것을 받아내 제대로 합의되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한다'	1213차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기자회견 서울지역 시국선언(185개 단체 참여) 전남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성명 총학생회장단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1월 14일		시국회의 개최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한일합의에 대한 입장 및 대응방향

1.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p>아시아연대회의 제언(법적 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p>	<p>합의 내용</p>	<p>한국정부 주장</p>	<p>문제점</p>
<p>사실과 책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 했다는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 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p>“아시아연대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의 관여 인정 - 아베 정부의 책임 최초로 표명 	<p>아시아연대회의 요구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일본정부 및 일본군)가 불명확하며, 가해의 양태(‘관여’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조직적 행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음. - 구체적 범죄 사실(위안소의 입안·설치, 관리·통제), 강제성(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상황) 및 피해의 지속성(현재도 지속)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 법 위반의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불명확함. - 기자회견 직후 아베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 법적 책임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 따라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님. -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이지 ‘아베 정부의 책임 표명’이 아님. 아베 정부가 최초로 책임 표명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p>아시아연대회의 제언(법적 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p>	<p>합의 내용</p>	<p>한국정부 주장</p>	<p>문제점</p>
<p>사실과 책임 인정에 기반한 조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 진상규명 :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 - 재발방지 조치: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실시 / 추모사업 실시 /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 	<p>“아베 내각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 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p> <p>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총리 대신 명의 공개적, 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 정부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배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책임 인정에 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만 내건 ‘대독 사과’ - 사과(오와비)를 공식사죄로 과장 해석 - 일본의 사죄가 “반복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한국 정부의 ‘불가역적 해결’의 의무 부담이 되어버린 황당함. - 사과의 진정성 매우 의문 : 기자회견 직후 아베 총리가 "앞으로 위안부 문제 전혀 말하지 않는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 발언. - 일본 정부가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 박음 : 기시다 외무대신, “배상 아니다” 발언 - 일본의 잘못에 대한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본말전도 - 진상규명, 역사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은 언급조차 안 됨

2. 일본정부 입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국민기금 당시 일본 내각총리대신 편지	2015.12.28. 한일외교장관합 의 일본측 표명사항	아니다!
<p>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 나아가 관현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p>	<p>...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p>	<p>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p>	<p>- 가해자(일본정부 및 일본군), 가해의 양태(‘관여’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조직적 행위), 구체적 범죄 사실(위안소의 입안·설치, 관리·통제), 강제성(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상황)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1993년의 고노담화로부터 명백하게 퇴보한 것임.</p> <p>-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편지와 완전히 일치함.</p>
	<p>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p>	<p>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p>	<p>1995년과 다른 점은 단 하나 “도의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것인데, 기자회견 직후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부정.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p>

<p>정부는 이 기회에 그 출신지를 막론하고 소위 중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받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p>	<p>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중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p>	<p>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과(お詫)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p>	<p>-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편지와 완전히 일치함.</p>
<p>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p>	<p>우리는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의 책임으로부터도 도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를 후세에 전달하는 동시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1993년과 1995년에는 강조되었던 ‘역사의 진실’, ‘역사의 교훈’, ‘미래의 책임’, ‘역사연구’, ‘역사교육’, 미래에의 각오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p> <p>- 오히려 아베 총리는 “미래 세대에 사죄의 숙명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퇴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p>

3. 공동합의문을 두고 탄 소리(다른 해석)

1228 합의문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발언
<p>일본측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 강구. -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 목적 재단설립, 여기에 일본정부 예산 일괄 거출 - 일한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실시 	<p>기시다 외상 공동합의문 발표 후 일본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중 재단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 	<p>윤병세 장관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엔은 배상금이냐" > "일본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출자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리를 아는 분들은 다 이해한다." - "그것을 보면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법률도 모르는 사람이냐"에 >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처 치유금" - 윤병세 장관 지난 해 12.27. 기자들에게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p>일본측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p>아베 신조 총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을 어기면 한국,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끝. 12월 28일로 모두 끝. 더 사죄 하지 않는다. - 이 문제에 관해 전혀 언급않겠다.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겠다. 	<p>한국 외교부 당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역이라 함은 한일 쌍방에 적용되는 것" -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왜곡 등의 망언을 할 경우에는 다시 문제제기 할 수 있다. (중략) 불가역성은 우리가 일본측에 내준 거라고 볼 수 없다."
<p>한국측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외상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 "철거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대전제" 	<p>한국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합의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일본도 그런 전제(소녀상 이전)가 아니라고 부인
<p>한국측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외상 "한국이 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신청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병세 장관 ;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민간차원 일. 정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 상호비난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모든 항목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

4. 합의발표 후 청와대와 외교부 억지 주장

<p>‘협상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상처 치유 방향 확고한 원칙’(12/28 박대통령 대국민 메시지)</p>	<p>피해자 의견 청취 및 협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차례 전달된 피해자 요구 반영되지 않음.</p>
<p>‘역대 정부 적극 나서지 않음. 우리 정부도 그랬다면 한일 관계 경색 겪지 않았을 것’(15.12.31 청와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의 외교적/정책적 실정과 일본정부의 잇따른 역사왜곡 행보로 인한 한일관계 경색 책임을 피해자와 민간에 돌림. - 역대 정부 피해자 지원 확대,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와 일본정부 법적 책임 확인 등 노력. 일본정부 법적 책임 이행 끌어내지 못했으나 현정부처럼 이를 포기하고 최종 타결 선언하는 무책임한 행보 없었음.
<p>‘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15.12.31 청와대 발표)</p>	<p>1993년 「고노담화」, 1995년 국민기금 당시의 내각총리대신 ‘사과의 편지’보다 진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것임.</p>
<p>‘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유언비어’(15.12.31 청와대 발표)</p>	<p>합의 전 평화비(소녀상) 이전 검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측 보도라고 지속 주장하던 외교부가 결국 합의에 이를 명시. 이외에도 일본발 보도 부인하던 정부 주장이 합의 통해 거의 사실로 드러나 오히려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정부였음</p>
<p>‘앞으로 어떤 정부도 손을 놓게 될 것.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 없게 될 것’(15.12.31 청와대 발표)</p>	<p>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합의를 받아들이라는 협박성 발언. 정부의 직무 유기와 무능 선언</p>
<p>‘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음’(15.12.31 청와대 발표)</p>	<p>일본군 위안부 문제 폭로와 진실규명을 비롯 유엔 및 국제기구 조사/권고, 국제적 우호 여론 확산 등 거의 모든 성과가 피해자당사자들과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온 것.</p>
<p>‘협의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2015년에만 외교부가 15차례 방문, 지방도 방문, 여가부 T/F에서 의견 수시 청취(15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대협, 정부 차원에서 의견 청취를 위해 방문한 적은 없고 외교부 관계자가 할머니들한테 명절인사 하겠다고 씬터 방문한 적만 있음. 그것이 의견 청취인가? 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호소 -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창원시민모임, "외교부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왔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협의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들어본 적이, 사전협의한 적이 없다" - T/F 참여학자들, 여가부 T/F는 백서 편찬 조직, 한일협상과 무관

행동계획 및 기구 구성안

<행동 계획>

1. 상황 인식

- 이번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 국제적 권고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신 일본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임. 애초 평행선을 달리던 한일 양측이 급속도로 합의를 도출하게 된 데에는 한일 협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요구 수용, '연내타결'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쌓기가 결합된 것.
-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여 과거 식민범죄와 관련된 일본의 역사왜곡 및 재무장 관련 현안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차단하였음. 앞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제어수단을 상실한 것은 물론, 이번 합의를 토대로 향후 한일 군사협력의 전면적 확대 등 일본 재무장 및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협력이 본격화 될 우려가 높음.
-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성과'라며 적극 선전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 등을 통해 재단 설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의 항의 등으로 사회적 분노 잦아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 피해자, 각계가 함께 연대하여 △ 굴욕 합의 전면 무효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촉구 △ 일본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등의 전국적, 전 사회적인 공동대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3.1절, 총선 등 주요 계기를 살려 사회적 쟁점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 12월 28일 굴욕적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재협상을 실현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함

2. 우리의 요구

-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뜻과 국제적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은 무효임
 - 12월 28일 합의는 피해자의 뜻과 국제적 권고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합의임
 - 조약 등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합의임.
- 피해자의 뜻이 반영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재협상을 해야 함

-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사죄하고 공식 배상을 해야 함. 또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교육해야 함

3. 활동 방향

- 12월 28일 한일 합의 무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재협상 촉구 여론 결집
- 대정부, 대 정치권에 12.28 합의 무효, 재협상 압박
- '10억엔 위로금' 대신 국민모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
-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추가 건립 등

4. 행동 계획

1) 무효 여론 결집

① 시국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14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② 각계 선언

- 대학생 선언, 여성 선언 진행
- 법조인 선언, 학자 선언, 여성 선언, 노동자 선언, 청소년 선언 등 각계 선언 추진

③ 서명운동 및 캠페인

- 명칭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 서명용지 : 첨부
- 기간
 - 1차. ~ 3월 1일 / 취합 후 한일 양 정부에 전달하고, 세계 1억명 서명으로 취합
 - 2차. ~ 8월 15일 / 취합 후 한일 양 정부에 전달하고, 세계 1억명 서명으로 취합
- 방식
 - 집회, 문화제, 캠페인, 자체 행사 등에서
 - 온라인
 - 캠페인
 - 전단지 제작, 배포

- 주요 도심, 야구장 등 밀집지역 등 집중 공략

④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뺏지 달기

△ 나비의 날개에 '한일 합의 무효, 정의로운 해결'을 작게 새겨서 제작하거나

△ 기존 나비 버튼을 배포할 때, '합의 무효, 정의로운 해결' 설명지 함께 배포하는 방식.

⑤ 강연, 영화 상영 등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점 교육

- 영화 및 영상 상영

2) 대 국회 사업 : 무효 및 재협상 약속 받기

- 국회에서 무효화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것이 실효적인 압박의 하나로 유의미하고, 총선 국면에서 쟁점을 유지하는 방안이기도 함

- 전국 모든 지역에서 후보들에게 무효 및 재협상 약속을 받고, 무효 결의안 등을 채택하도록 함

3) 거리 행동

① 전국 동시다발 수요 시위

- 전국 개최 장소 및 참가인원 매주 집계, 보도자료 배포

- 지도 제작, 배포

② 문화제(집회)

- 주요 계기마다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집회) 개최

- (안) 1월 30일(토) 1차

③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3.1 거리행진

- 전국 동시다발로 / 규모있는 행진과 문화행사, 집회 등

5. 국제연대 활동

1) 국제사회에 합의의 부당함 알리기 및 지원요청 활동

- 유엔 사무총장, 인권 최고대표, 관련 특별대표, 특별보고관, 인권기구 등에 긴급 호소서한 발송

- 2016년 CEDAW 일본 심의 : 63 Session(15 Feb 2016-04 Mar 2016) 대응

: Written submission 제출 기한 : 22 January 2016(10쪽 내)

- 양대 노총 국제부 협의(1/29 오후 2시) 후 ILO 대응 방안 마련

- 국내 주재 대사관, 유엔 각국 대표부, 유럽 등 의회, 기존 해외 연락처 망라해 합의의 문제점 알리는 정보 제공 활동

- 미국 캠페인 : 3월 초 워싱턴 국제심포지엄 개최, 일 대사관 앞 시위, 거리 캠페인 등
- '부당한 합의 무효화, 정의로운 해결 요구서(가)' 마련하여 국제 여성, 인권 NGO 연명 받아 한국정부/ 일본정부/ 유엔에 제출(1-2월 연명, 3월 미국 캠페인 후 뉴욕으로 이동해 현지 여성단체와 공동 제출)

2) 일본군'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 지속, 확산

- 1212차 연대 행동 이후 각지에서 정기/비정기적으로 시위 및 캠페인 요청
- 2차, 3차 등 각국 공동행동 지속
- 1인시위, 전시회, 퍼포먼스 등
- 현지 여성/인권/평화단체등과 연명하여 한국/일본대사관에 요구서 전달 요청
- 활동 내용에 대해 현지 언론에 적극 홍보

- 합의 부당함 알리는 내용 포함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적극 참여 요청
- 시위 및 캠페인에서, 자체 이벤트에서, 각 홈페이지, 카페, SNS 등 온라인 확산

- 재단 모금 참여 요청

3)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 일자 : 2016년 2월 18일(목)~19일(금)
- 장소 : 미정
- 참가국 :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 남측, (북측), 중국 대표단
- 주요 일정 : 본회의 및 19일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

<전국행동 구성(안)>

1. 취지

-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 회복에 역행하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의하는 각계를 규합하여 힘있는 공동대응을 해 가기 위함.

2. 명칭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3. 구성 및 체계

1) 구성

- 취지에 동의하는 지역, 단체, 개인 참여

2) 체계

○ <전국행동> 회의

- 구성 : 참가단체 대표, 개인 참여자
- 역할 : 각 단체, 지역별 활동 계획 공유, 소통.
주요한 사업 전환 관련 논의
- 1차 : 14일 시국회의로 같음

○ 대표자회의

- 구성
: 주요 지역 및 부문, 전국단체 1인씩 추천. 약 20여명 정도
: 정대협,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일협상폐기대학생대책위,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국평화비전국행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 살림, 한국 YMCA, 소셜벤처 마리몬드
: 종교, 사회단체 계속 확대 예정

○ 실행위원회

- 구성
: 언론홍보, 기획, 대중행동, 국제연대 각 업무별 위원회 구성.
: 책임자(단체)를 선정하고, 개인과 단체 활동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운영.
- 언론(정대협), 홍보(대학생대책위, 마리몬드), 기획, 대중홍보(진보연대, 대학생대책위), 국제연대(참여연대, 정대협) 등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 (정의기억 재단) 설립 안

1. 설립 배경 및 목적

- 일본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본정부의 사실 인정과 함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
-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사업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쟁범죄 인정도,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도 아닌 애매모호한 사과와 함께 한국정부가 만들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 엔을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시도. 한국정부 또한 이 해결안에 합의
- 일본국가 주도의 범죄인정도,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도 아닌 애매한 형태의 재단출연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시도에 대응 필요성
-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기여

2. 주요 사업 내용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 및 지원사업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기록 보존사업
3.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4.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사업
5.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6. 위의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연관된 출판사업

7. 위의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모금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모금방법

1. 국내모금

- 전국행동 참가단체의 경우, 각 회원들에게 특별모금 방식으로 직접 모금 후 재단에 전달
- 일반대중 모금일 경우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임시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하고, 모금
- 사무국을 통한 인터넷 모금사이트 개설 / 스토리 펀딩
- 상품 제작/판매를 통한 모금

2. 해외 모금

- 세계행동의 일환으로 모금

4. 설립일정

1/14 ~	전국행동 참가 단체 회원들 모금시작
1/15~1/18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 신고
1/28~1/31	임의단체 등록 완료 및 모금계좌 개설
2/1~2/28	발기인 구성 및 설립자 재산출연
3/1, 3/8	재단법인 창립총회 개최
3/21~3/31	주무관청 설립인가 완료
4/1~4/5	설립등기
4/5~4/8	사업자등록증 신청
4/8~4/13	주무관청 보고 및 출연재산 이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하고서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세운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줄속으로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행동'은 2016년부터 다시 한 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반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사 '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개인참여 : 335명

Elly Park, 강민송, 강민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 강상욱(참여연대), 강성원(더프라이믹스 국제사업국 팀장), 강애란(이화여자대학교), 강예림, 강유미(무소속), 강인혜(미용실(미친언니들의용감한실험실)), 강전옥, 고경희(전여농제주도연합), 고병진(이화여자대학교), 고숙경, 고유나(정의당 당원), 공혜경(정의당), 국경희(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 권미향, 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유경(이화여대여성학과), 권유정, 권성숙(정의당), 권혁식(개인), 권현우, 김가영, 김경연(에듀코), 김경하(마리몬드), 김광출, 김규찬(정의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김기형(정의당), 김길우, 김나경(비전교회 전도사), 김나래, 김남희(참여연대), 김다혜, 김대원(정의당), 김덕주(충청평화나비), 김두리((사)열린여성), 김리나, 김명보(마리몬드), 김명선, 김명희(바꿈세회원), 김모니카(정의당 여성위원회), 김민우(정의당경산시위원회), 김범준(마리몬드), 김병우, 김상균, 김서경(조각가), 김성혁(중등고학생), 김성훈, 김순이(주부), 김승호, 김신재완(부산민족문제연구소), 김아람(청년나비), 김애경(직장인), 김인순(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김영란(인천여성회), 김영숙, 김영은(연소주), 김영이, 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회장),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김영환(직장인), 김예연(가천대학교), 김운성(조각가), 김유라(이대 여성학과), 김운옥(전 정대협 상임대표), 김은성(길벗어린이도서관), 김은정(참여연대), 김의경, 김잔디, 김장기, 김재원, 김집선(부산민문연), 김계남(정의당), 김종현, 김준희, 김지현, 김진경(이화여대여성학과), 김진숙(당진어울림여성회), 김창록(경북대 법학과), 김태균, 김태문, 김태선(서울시민), 김태일(참여연대, 한성대학교대학원사학과), 김한결, 김현석(도봉촛불), 김형우(노동자), 김혜린(마을학교), 김혜숙, 김혜연, 김호일(정의당), 김화순(한신대학교), 김화정(정의당여성위원회), 김희선(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 나은중(강산애), 남대회, 노봉훈, 도태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동참합니다((사)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류은숙(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 류재순(성남평화의 소녀상지킴이), 류진옥, 마정윤(이화여대 여성학과 통합과정), 맹정은(정의당 부산시당), 목연주, 문도운(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문선영, 문선영(정의당여성위원회), 문순영, 문영미(인천남구의원), 문용포(곶자왓작은학교 대표), 문이슬, 문계열(민주부산행동), 민경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박강민, 박기쁨, 박민규(마리몬드), 박민수, 박보람, 박보람(이화여대), 박보혜(마리몬드), 박세라(마리몬드), 박소현(정의당), 박수빈, 박수연, 박영호, 박원희((사)두꺼비친구들), 박용수(한화FP),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사무장), 박은지(직장인), 박은호, 박인경(울산평화나비), 박주희(서울여성회), 박지영, 박택선(KB손해보험), 박한기(정의당), 박혜정, 박효주(참여연대), 방미연(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방병현(정의당 남양주), 배외숙(이화민주동우회), 백가운, 백시진(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변영주(감독), 서덕석(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동국, 서은정(인천여성회), 서혜진, 성명옥(한국여성학자협의회), 손병주(성남역사문화답사사회회장), 손보경, 손은규, 송가영(윤성연아맘), 송민기(성북평화운동위원회 대표), 송슬기(춘천평화나비), 송연주(정의당), 송은하, 송지연(정의당), 송태성, 송태효(어린이왕자인문학당 경희대비폭력연구소), 송호진, 수영(참여연대), 신경아(두꺼비친구들), 신경화, 신기대, 신길웅(정의당 남동구위원회), 신동화, 신영옥(정의당 인천시당 남동구위원회 홍보국장), 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신혜원(작가), 신혜현(마리몬드), 심금숙, 아재용(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안가연, 안은서(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양승진, 양태환, 양현아(서울대 법학과), 엄재희(대학생), 여성윤(경북 시민광장), 여성윤(경북시민광장 대표), 오규상, 오승권, 오윤희(당진어울림여성회), 오현숙(정의당 여성위원회), 우이영(개인), 원동욱(참여연대), 위길연(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감독), 유동림(참여연대), 유미송(주부), 유민채(생태교육연구소터), 유영애(교사), 유정숙, 윤세중, 윤영애(전 한교여연 총무), 윤은영, 윤정모(작가), 윤지영, 윤청자, 윤혜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장), 윤홍조(마리몬드), 유재(이화여대여성학과), 이가람, 이경옥, 이경원(정의당), 이금남(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이만열, 이명수(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 이미애(정의당경기도당여성위원장), 이미현(참여연대), 이병국(미디어빠죽), 이보라미(정의당), 이상철(평화통일시민연대), 이석재, 이선경(정의당경기도당여성위원회), 이선희, 이소현(부평구의원), 이수비(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슬비(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이시우(사진작가), 이연정, 이영선(강사), 이영아, 이영아(참여연대), 이영주(마리몬드), 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 이윤주, 이은섭, 이인숙, 이재근, 이재영, 이정순, 이준호, 이중윤, 이지은(참여연대), 이지혜, 이지호(마리몬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하령, 이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한표(정의당), 이현아, 이현주(중학교 역사교사), 이혜라, 이혜미, 이혜숙(국사보충 교사), 인은영(인천여성회), 임동순(관악사립사는세상), 임석규(국정화를 반대하는 공주대인 연합 공동대

표), 임은주, 임주원, 임창빈(정의당원이자 민주당원), 임홍순, 장란미, 장민정, 장상화(정의당 고양시여성위원장), 장상희, 장서운, 장소영(정의당), 장재구, 장주리, 장지혜, 장한새(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 장해정(주부), 전보임(참여연대), 전영욱(역사문제연구소), 전유리, 정경민, 정서희, 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수빈(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정연옥(정의당), 정영란, 정영섭(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영실, 정원근, 정유경(정의당), 정은형, 정인재(인천 노동), 정재석, 정재은(고려대학교), 정종혁, 정진택(정의당 대의원), 정한교, 정현근, 정현순(주부), 조성이(마리몬드), 조성희, 조원균, 조운호(광명북고), 조이현입, 조주형((사)생명평화마중물사무처장), 조향미(이화민주동우회), 주희은, 진은미(정의당), 차영림, 차은하(참여연대), 천용소(참여연대), 천희진(정의당), 최민우, 최병선(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최선미(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최성애, 최성희((사)열린여성), 최성희(성남시평화의소녀상지킴이), 최수이(마리몬드),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최용익(연소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최은희(마리몬드), 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재석, 최철, 최형숙(새로하나 집행위원), 하상수(금속노조), 한국염, 한상욱(익산YMCA 간사), 한상필, 한상현(노동문제단), 한예니, 한운정(정의당), 한혜진, 허은중, 허필자(인천여성회), 홍리나(마리몬드), 홍성희, 홍영두(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홍인기(교사),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황경옥, 황병호(영천시 정의당), 황선희, 황주영, 황혜림(늘푸른어린이도서관)

참가단체 : 383단체

(사)동학민족통일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1923한일제일시민연대,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4.9통일평화재단, AG 일본군 위안부 대책협의회, AWC한국위원회, 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 KYC(한국청년연합), NCCK여성위원회, 가대하다, 가톨릭대 평화나비,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원대 평화나비, 건국대 쿠틀플레이, 건대하다, 경기 청년하다, 경기 평화나비, 경기대 평화나비,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유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과기대평화나비, 경남대학생겨레하나,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 경상대평화나비, 경실련, 경희대(국제)평화나비, 고등학생일인시위, 고등학생평화비, 고려대 청년하다, 고려대 평화나비,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대 평화나비, 관악여성회, 광영여고 대홍나비,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극단 고래,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여교역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민회, 기억의터전립추진위원회,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단국나비,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 평화나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어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학생겨레하나, 대한예수교장로회여교역자회, 더 맑음, 더불어민주당오정구지역위원회, 동덕나비, 동서대평화나비, 런갯마당, 로라넷, 마리몬드, 명지나비, 뮤지컬창작소'영',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마다소리, 반전평화연대(준), 보건 건강하다, 부산 평화나비,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회진보연대, 세세상올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강하다, 서귀포여성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서울 평화나비, 서울대 청년하다, 서울대 평화나비,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서울여대 슈터플레이,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남 평화의소녀상지킴이, 성남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북평화운동위원회, 성신평화나비, 성신하다, 성인지에산전국네트워크,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주진위원회, 소녀의꿈실천단, 소셜아트플래툰,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숙대하다, 숙명눈꽃나비, 송실하다, 스튜디오 사기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신라대 평화나비, 신촌대 소셜아트학과,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강남아이쿱생협(준), 강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준), 양천아이쿱생협, 계양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인천아이쿱생협,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강화아이쿱생협, 고양과주아이쿱생협, 김포아이쿱생협, 덕양햇살아이쿱생협, 의정부아이쿱생협, 춘천아이쿱생협, 광명내래아이쿱생협, 광주하남아이쿱생협(준), 군포아이쿱생협, 성남아이쿱생협, 의왕아이쿱생협, 안산아이쿱생협, 울목아이쿱생협, 수원아이쿱생협, 수원미래아이쿱생협, 용인아이쿱생협,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화성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아산YMCA아이쿱생협, 천안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남내포아이쿱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홍성아이쿱, 군산아이쿱생협, 남원아이쿱생협, 부안아이쿱생협(준), 순리아이쿱생협, 전주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자연아이쿱생협, 광양아이쿱생협, 구례아이쿱, 목포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YMCA아이쿱생협, 여수YMCA아이쿱생협, 한울남도아이쿱생협, 경주아이쿱생협(준), 구미아이쿱생협,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상주아이쿱생협(준), 포항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

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남부산아이쿱생협, 동래아이쿱생협,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해운대아이쿱생협, 거제아이쿱생협, 김해아이쿱생협, 마산아이쿱생협, 사천아이쿱생협, 양산아이쿱생협, 장유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 창원아이쿱생협, 통영아이쿱생협, 제주아이쿱생협, 한라아이쿱생협, 전국생명보험산업(준),안산여성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안양대 평화나비,아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양산여성회,양주여성회,여성교회,여성사회교육원,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예수살기,예일여고 역사동아리 아이비,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오산여성회,용인여성회,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우리만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대학생겨레하나,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 인권위원회,원불교여성회,원주 평화나비,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육지사는 제주사랑,의정부두레여성회,의정부평화비(소녀상)건립위원회,의혈하다,이대하다,이천여성회,이화나비,이화민주동우회,인권동아리HIT,인권운동사랑방,인천평화나비,인천여성회,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국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연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생행진,전남진보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태일재단,정의당,제주 평화나비,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중앙대 평화나비,진주 평화나비,진주교대 평화나비,진주보건대 평화나비,진주여성회,진해여성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창원여성회,천안여성회,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나비,청년독립군,청년예술가네트워크,청년좌파,청년하다,청춘의지성,추계예대 총학생회,춘천 평화나비,충남대 평화나비,충북대 평화나비,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충청평화나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통일광장,통일맞이,통일문제연구소,통일의길,평택대평화나비,평택여성회,평화3000,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평화나비 네트워크,평화나비 부산연합,평화나비 서울연합,평화나비신촌연합,평화나비 인천연합,평화나비청주연합,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시민행동,포항여성회,하남여성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회외사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역사회,한국기독교장로회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대상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한국여자수도도회장상연합회,한국외대평화나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가회의,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평화교육훈련원,한국한부모연합,한림대 평화나비,한 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한신대 평화나비,한인교육마당집,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한일협상무효예술인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함안여성회,홍대하다,홍익대미술대학생회,화성여성회,홍사단,희망나비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 합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올바르게 해결되어 지난 24년간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변해야만 하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회복을 위해 과연 진심으로 노력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두루뭉술한 말과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가 아닌 '대독사과'라는 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악랄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운영과 주체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범죄의 가해자로서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 자금만을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으며, 그 자금의 성격 또한 '배상금'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이런 부실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용 조치'에 동의한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또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적절히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자고 까지 합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뜻,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본측의 요구만을 수용한 굴욕적 합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비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천 번의 수요일을 지켜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과 성금으로 세워진 평화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과립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평화비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지난 24년간 치열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역사의 상징물이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공공적 재산입니다. 평화비의 이전을 논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의 합의 앞에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합의가 피해자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25년간 거리에서, 국제사회에서 외친 피해자들의 뜻을 멋대로 왜곡하여 이번 합의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해 왔습니다. 이는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 규명, 3. 공식 사죄, 4. 법적 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 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라는 일곱 가지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 중 그 어떤 한가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실로 부실한 합의이며, 동시에 그동안 싸워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한 순간에 무시한 폭력입니다.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결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은, 한 명의 피해자들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한시라도 빠르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결은 그저 빠르게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 국민과 피해자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지속적으로 밝힌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원칙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가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아래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역사왜곡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정의 회복의 원칙도, 피해자와 국민의 뜻마저도 저버린 이번 합의는 아무런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무효입니다.

더 이상 부당한 합의를 피해자와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들의 진정한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번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의 뜻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일본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 합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올바르게 해결되어 지난 24년간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은 '제대로'된 해결이 아닌 졸속적인 외교 담합에 그쳤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회담 직후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두루뭉술한 말과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가 아닌 '대독사과'라는 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악랄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운영과 주체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1992년부터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범죄의 가해자로서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 자금만을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으며, 그 자금의 성격 또한 '배상금'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성격도 모호한 10억엔의 출연금으로 '최종적인' 해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그리고 전쟁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평화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더불어 세계의 전쟁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피해자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염원을 담아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이후 수차례나 '소녀상(평화비)이 철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평화비 철거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합의문은 '사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닌 대통령에게만 하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평화비 이전을 조건으로 내건 합의문은 '해결'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최종적 해결'이란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는 등 침략 역사를 왜곡, 은폐하며 다시 무장하여 전쟁하는 일본으로 거듭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말라는 것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제2, 제3의 폭력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정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해왔습니다. 이는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 규명, 3. 공식 사죄, 4. 법적 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 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라는 일곱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이 중 그 어떤 것도 담지 않은 실로 부실한 합의인 만큼,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의 합의문을 전면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7가지 요구안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내외 정의로운 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